‘전국 첫 시행’ 신안 버스공영제 연간 160억 경제효과

신안군 주민들이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1004번 노선(신안-자은 방면) 공영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경제성 용역 결과…버스민영제·준공영제 比 효율 ↑
2013년 행정구역 전면시행…사업 지속 정당성 확보

신안군 버스공영제 사업이 연간 1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며 버스민영제·준공영제 운영 대비 효율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안군에 따르면 버스공영제를 시행한 지 올해로 16년 째를 맞아 그동안 이용객 수 증가, 군민 이동량 증가, 이동 편의성 향상,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며 지난 6월30일 ‘버스공영제사업 경제성 분석 검토 용역’을 마쳤다.

국내 교통시설사업 성과지표 사례와 국외 교통시설사업 성과지표 사례를 바탕으로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9개 항목의 정량 편익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연간 160억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으며 버스공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천333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기준 민영제와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신안군은 버스 대당 7천200만원이며, 민영제를 하는 목포시의 경우 대당 약 8천600만원, 준공영제를 하는 광주시는 대당 1억3천7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당 1억5천700만원으로 신안군의 버스공영제 사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임자도 버스공영제 시범운행을 시작,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관할 행정구역 전체 버스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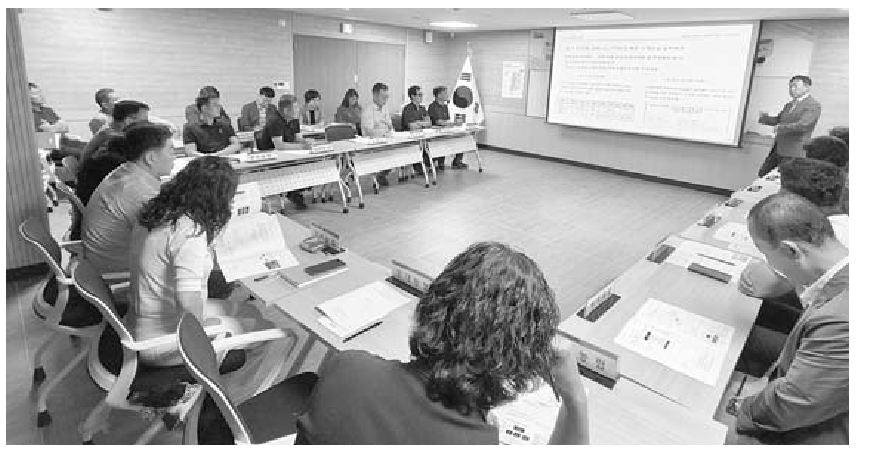
지난해부터는 버스 도착예정시간, 실시간 버스 위치 등을 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시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신안군의 버스공영제를 벤치마킹하려는 타 지자체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버스공영제 사업이 연간 160억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정당성이 확보됐다”며 “신안군의 우수 교통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안=양훈기 기자

해남군, 원예작물 유통구조 산지중심 개편

배추·마늘 경쟁력 확보…원예산업 발전계획 반영



해남군이 배추, 마늘 등 주요 원예작물의 유통구조를 산지중심으로 개편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농민회 및 품목별 단체 대표,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협과 법인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변화된 정부정책과 유통환경에 맞춰 기존 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전략품목인 배추, 마늘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진>

일반적으로 유통 구조는 생산·소비 구조, 유통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 가운데 생산지의 규모화가 부족하고, 소비지에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존재하는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신속한 수집과 분산이 가능한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이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잡았다.

최근 들어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단계가 복잡해 지면서 중간 유통 상인만 이득을 보고 정작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발해 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기능확대와 공영도매시장 경쟁 구도 제도화,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 조기 구축 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용역을 통해 해남군 배추, 마늘 등 겨울채소의 산업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산지중심의 유통체계를 도입하고, 농가를 조직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해남군 원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8월 용역을 완료하고 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최종 수정해 내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승인받을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발빠르게 대처해 해남 대표 원예농산물인 배추, 마늘 등의 비효율적인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생산 농민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겨울채소 산지유통 기반시설조성 등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서 뱀장어 잡기 체험 ‘호응’

함평군은 22일 “지난 20일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뱀장어 100㎏을 방사하고 잡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함평 특산품 뱀장어와 함께 함평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바다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관광객들은 뱀장어와 함께 물속에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고, 잡은 뱀장어를 즉석에서 조리해 먹는 등 재미와 건강까지 챙겼다.

한편, 돌머리 해수욕장은 해수풀장과 어린이 물놀이장, 해수찜 치유센터, 갯벌 체험 등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으며 근교에는 자동차극장,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등이 있어 알짜여행 코스로 제격이다.

함평군은 뱀장어 잡기 체험 행사를 오는 27일, 8월3·15일 총 3회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함평=김연수 기자

함평군이 지난 20일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체험객들이 맨손으로 뱀장어를 잡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함평군 제공>

완도군,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기간제·공무직까지 확대…포상 휴가 등 혜택 제공

완도군은 22일 “8월22일부터 행정안전부 시범 사업으로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완도군은 공무원이 매월 ▲각종 아이디어 발굴 또는 채택 ▲업무 개선안 마련 ▲적극적인 민원 처리 ▲적극 행정 교육 수료 등을 수행하면 점수에 따라 상시 학습, 완도사랑상품권,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이용권, 포상 휴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협업 사례도 마일리지를 부여해 공직사회의 고질적 관행인 칸막이 행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직 내 적극 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모두 참여토록 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진도군, ‘진도서촌 간재미거리’ 명소화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 선정…2년간 10억 투입

진도군은 22일 “전남도 공모사업인 2024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 진도서촌 간재미거리의 명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지역별 특화된 음식거리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음식거리 기반 구축을 위해 실시한다.

거리 조성 대상지는 오랜 기간 전통을 자랑하며 간재미 요리를 취급하는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진도읍 쌍정 2길, 남동 1길 일원이다.

진도서촌 간재미거리는 올해부터 2년간 10억원의 사업비로 거리 명소화를 위한 상징물 설치, 접객 서비스 강화,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진도=박세권 기자

강진군, 드론용 분무장치 신기술 시연

부착력 4배 이상 높아…30% 비산 저감 효과도

강진군이 드론용 비산 저감 AI(Air Induction Nozzle)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을 선보이며 병해충 방제와 비용 절감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군동면 벼 포장에서 2024년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사업의 하나로 개발된 드론용 비산 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연을 관련 업체와 농업인들이 참석 가운데 실시했다. <사진>

AI노즐은 공기 흡입형 노즐로 분사되는 물방울에 공기를 주입해 공기 방울로 만들며, 농약 방울의 크기를 4배 이상 키움으로써 작물 표면의 부착력을 4배 이상 높이고 기존 방제 대비 30% 비산 저감 효과를 보인다.

이번 시연은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 절감은 물론 농약 비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가 목표다.

농촌진흥청 실증결과 벼 40%, 콩 12% 가량 방제 효과가 향상됐으며 지나친 방제로 인한 약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다.

최영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시연이 농업용 드론 기술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제 역할 못해

재해위험지구·땅꺼짐 등 조사 제외

최근 무안군 재해위험개선지구 일부가 포함된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 지역민들의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무안군의회가 이에 대한 조사 등을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4-12일 9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등 5건이다.

이번 행감에서 일로읍 망월리 불법성토 현장 등 현장 확인을 실시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안읍내 신규 아파트 땅꺼짐, 재해위험개선지구 아파트 신축 등이 진행돼 논란이 일었던 현장은 행정사무감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에 예방조치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안읍 한 주민은 “이호성 후반기 의장이 취임사에서 지역현안에 기민하게 반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내 땅꺼짐에 대해 실질적인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목포해경, 피서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관내 유·도선, 선착장 등 19개소 안전관리 실태 점검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여름철 성수기 기간에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 선박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역별 취약분야 등을 종합 분석·진단,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기상악화 시 운항 정보 공유를 통해 출항통제 조치 등 운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중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5대 주요 안전저해행위’로 ▲무면허 영업 ▲영업구역·시간·항행 조건 위반 ▲주류 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 ▲승객 안내 및 매뉴얼 비치 위반이다.

이 밖에 지자체, KOMSA 등 내·외부 인원 기동점검단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도선 및 선착장 등 19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하계 피서철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위해 다중이용선박 사업자 및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선박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